내년 10월 전국체전 마라톤 北 개성서 출발할 수 있을까

서울시, 폐회식·일부 경기 북한서 치르는 방안 논의

서울시는 내년 10월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폐회식과 일부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마라톤의 경우 출발지점을 북한 개성시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00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열린다.

시는 개회식을 서울(잠실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평양(평양능라도경기장)에서 치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시는 평양 경기장과 숙박시설 현황을 고려해 평양에서 치를 경기 종목도 선정할 방침이다.

축구나 마라톤 등 남북화합·평화의 상징성이 있는 경기의 분산 개최가 우선 추진된다.마라톤은 개성시(출발)→판문점→임진강→통일전망대→파주시(도착)를 지나는 구간이 거론된다. 축구경기는 서울·평양에서 나눠 치러진다.

시는 성화봉송과 경평응원단 구성 등을 통해 남북화합의 전국체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화봉송의 경우 북측 성화와 우리측 성화를 판문점에서 합화한 후 주경기장에 안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경평응원단을 조직해 서울시민은 평양선수단을, 평양시민은 서울선수단을 응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북측 선수단의 전국체전 참가 여부를 놓고는 남북 시·도 전체 참여하는 경우, 평양시만 참여하는 경우, 일부 경기에 북측 선수단을 초청하는 경우 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안에 서울·평양 남북 공동개최 포괄 합의문 작성을 마치고 남북 공동개최 실무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00주년을 이어 온 민족체전을 계기로 한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겠다"며 "체전을 대회전·후 남북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5일 '보이는 미래 컨퍼런스 2018' 기조연설에서 "전국체전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화해와 평화의 상징성이 있는 종목의 경기를 함께 개최하거나 북측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원순 서울시장 "추가 밀첩접촉자 철저 조사해야"

메르스환자 격리병동 찾아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격리 치료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방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 "환자가 비행기 안에서 입국과정에서, 또는 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의 이동과정에서 밀접접촉자가 없는지, 또 본인이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확진자 A(61)씨가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격리병동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행기 안이라는 곳은 밀폐된 공간"이라며 "이 분이 비즈니스석에 탔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사람 뿐 아니라 일반 이코노미 승객들도 다 이용할 수 있다. 21명 외에 추가로 더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시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비행기 안에 탔던 400명을 다 분석해서 예를 들면 환승한 사람들까지 통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만에 하나 그 사람들 중에 발병이 된다면 지난번처럼 심각한 혼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이해찬-이재명 내일 만난다…당 대표 취임 후 첫 만남

예산정책협의차원 대표단 일행 경기도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1일 경기도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다.

이 대표 취임 보름 만의 첫 공식 만남이다.

경기도는 예산정책협의차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를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의 경기도 방문은 애초 원내대표 주관의 예산정책협의회였지만, 이 대표의 전국순회 일정과 겹쳐 성사됐다.

경기도를 찾는 이 대표 일행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과 대변인단, 예결위 위원 등 30~40명 규모일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도는 이재명 지사와 행정 1·2부지사, 평화부지사, 주요 실국장 등이 이날 오전 10시 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들을 맞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1364억46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1조3255억100만원) 등 모두 40개 현안 사업 1조7967억1400만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달 3일 국회에서 지역구 여·야 의원 36명과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었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역점을 두는 통일 대비 남북 교류 사업을 놓고 이 대표와 교감할지 관심사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앞장서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취임 뒤 정무부지사 명칭도 평화부지사로 정하는 등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초대 평화부지사는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당 대표 경선 당시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이 대표와의 첫 만남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직접처벌…관련 권한 환수

자치구에 줬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 환수

유명무실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부활 시도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와 택시 운송사업자 관련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린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도로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나 취소 등 처벌을 가한다.

그간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됐고 구가 자체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사례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자치구가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에 민원신고건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실제로 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올렸다.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가 2명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 병과율도 100%였다. 반면 환수 이전 3년간 평균 처분율은 48%, 삼진아웃 사례는 2명에 그쳤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택시가 승차거부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전자우편(taxi120@seoul.go.kr)으로 전송하면 된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